

정부의 K방역, 노동자 일 시키는 건 안 건드린다

관련 기사 12면



코로나 확산 속에서도 출근하는 쿠팡 노동자들

김종민

기후위기의
대안

5~7면

부동산 가격 상승세
계속 둔화될까?

3면

전국민고용보험
정부와 사용자 부담
확대 없는 짚뱀 개혁

10면

프랑스 사회주의자가
말하는
프랑스
전국민고용보험

11면

이스타항공
일자리 보호 위해
국유화하라
재매각 말고

4면

정의당 혁신안
무엇이 바뀌어
새로워질까?

8면

온라인 기사

★ 전공의들은 노동조건 개선과
공중보건을 위해 싸워야 한다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그리스-터키 영해 갈등이 보여주는 것

<노동자연대> 기본입장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이어 가고자 한다. 이 전통은 처음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시작했고, 레닌·룩셈부르크·트로츠키가 물려받아 전해 준 전통이다.

이 전통에 따르면, 전쟁·빈곤·기아·착취·차별·환경파괴 등은 자본주의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다. 난민·기후변화·미세먼지 등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사회주의 사회이다. 사회주의는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지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시스템(이하 체제)이자 이를 구축하기 위한 운동과 사상이다.

소련의 경험은 노동자 혁명이 한 나라에 고립돼서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소련 고립의 결과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였다. 그 뒤 동유럽과 북한, 중국에서 스탈린주의 정당들이 소련과 비슷한 체제를 건설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노동자들이 국가자본주의와 시장에 맞서 싸우는 투쟁을 지지한다.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노동계급은 사회의 부(富)를 창출하는데도 그 생산 수단과 방법을 통제하지 못한다. 사회주의는 노동자 권력이고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이다. 오직 노동계급 자신의 대규모 투쟁으로써만 차별과 착취로 점철된 체제를 끝낼 수 있다.

노동계급은 사회의 다수이고 사회주의 운동의 주축이다.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하는 핵심적 구실 덕분에 그들은 다른 사회세력과 달리, 생산을 멈추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들 존재 조건의 집단성 덕분에 노동자들은 생산 수단과 생산 방식을 집단적으로 조직해 새 사회의 토대를 놓을 수 있다.

개혁만으로 충분치 못하고 혁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개혁 투쟁을 지지한다. 조건을 지킬 수 있고, 자신감과 투쟁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개혁은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을 끝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차별과 착취, 환경 재앙이 사라지려면 새 사회가 건설돼야 한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새 사회로 가는 길은 없다. 지금의 의회·군대·경찰·사법기관을 노동계급이 인수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기구들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 발전했고,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에 맞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설계돼 있다. 지금의 체제는 수리하거나 개혁할 수 없고, 해체되고 없어져야 한다.

노동계급에게는 전혀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이뤄진 노동자 평의회를 기반으로 한 노동자 국가가 그것이다.

의회 활동은 기껏해야 현 체제를 반대하는 선전에 쓸모 있을 뿐이다. 물론 우리는 공직선거에서 자본가 정당의 후보가 아니라 진보·좌파 후보를 지지한다. 또한 자본가 정당들의 공식 정치 지배로부터 독립을 촉진하는 정치 활동을 지지한다.

그러나 지금의 체제를 없앨 수 있는 것은 노동자들 자신의 대규모 행동뿐이다.

국제주의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이고, 세계 노동계급은 전쟁, 기아, 기후변화, 미세먼지 같은 국제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회세력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운동은 국제적이어야 하고 만국의 노동자를 단결시켜야 한다. 역사를 보면, 외교라는 수단을 통해 제국주의간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 연대해야 한다. 반대로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과 대립시키는 것 일체를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열강의 세계 지배와 이를 위한 그들의 각축과 전쟁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는다. 북

한 핵무기는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 패권을 유지하는 데 이용하는 핑계일 뿐이고, 진정한 쟁점과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등 서방의 북한 간섭과 압박을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하에서 억압받는 민족들의 자결권을 지지한다. 또한 민족 자결에 반해 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된 한민족의 재통일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주민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평등과 해방

자본주의는 민족,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고용형태(정규직 / 비정규직), 그 밖의 다른 차이들로 노동계급을 분열시킨다. 우리는 여성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평등을 지지한다. 우리는 모든 여성의 임신과 출산의 자기결정권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우리는 성소수자 차별과 천대를 반대한다.

우리는 인종차별을 반대하고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유입 억제를 반대한다. 우리는 모든 난민을 억류 상태에서 풀려나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난민 신청자들이 한국에서 살 권리를 위해 투쟁한다. 특히, 우리는 거짓에 근거해 비난받고 있는 무슬림에 대한 천대와 혐오를 반대한다.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 탈북민 등 차별과 천대를 받는 집단 모두가 권리를 누리 기 위해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시민적·정치적 권리 제한을 반대한다. 이 법은 '북한의 위협'과는 큰 관계가 없고 오히려 남한 내 정치적 반대를 잠재우기 위한 마녀사냥용으로 권력층이 종종 사용하는 무기이다.

갖가지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투쟁은 사회주의적 투쟁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인 한편, 노동자 권력(사회주의) 없이는 차별로부터의 해방(민주주의)이 불가능하다.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민주적이고 전투적이며 계급투쟁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하며, 계급협력주의를 거부한다. 또한 우리는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을 지지한다. 즉, 노동조합 운동은 차별과 부당함에 반대하는 투쟁 일체를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착취의 결과에 저항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노조 지도층의 역할은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에게서 독립적으로 투쟁할 수 있도록 현장 기반 운동이 건설돼야 한다.

혁명적 당

노동자 혁명이 성공하려면 노동계급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혁명적 당으로 조직돼야 한다. 그런 정당은 노동계급과 차별받는 여타 집단들의 일상적 저항 조직들 안에서 활동함으로써만 건설될 수 있다.

노동조합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혁명적 조직이 별도로 필요하다. 혁명적 조직은 노동조합 운동으로부터 생겨나 세워질 수 없고, 오히려 자본주의에 혁명적으로 반대하는 소수(노동자뿐 아니라 청년·학생도 포함됨)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운동 내의 비혁명적 경향들을 그저 비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개혁주의 지도자들과의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 정치가 당면 투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실제로 입증해야 한다. 공동전선이라는 수단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점검하고, 공동전선을 통해 혁명적 사상과 실천의 우수함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종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보여 줘야 한다.

우리는 이런 당의 초석을 놓으려 무진 애를 쓰고 있다. 위에서 설명된 우리의 기본 입장이 대체로 수용되면 우리와 함께 합시다.



국무주무관

재난지원금 배제는 가장 취약한 계층인 이주민들을 더 큰 고통에 빠뜨릴 것이다. 5월 7일 이주·난민 단체들이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열어 재난지원금을 이주민에게도 평등하게 지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주민 재난지원금 지급

인권위 권고 이행 미루는 경기도, 미등록자 배제한 서울시

임준형

서울시가 “서울시에 외국인 등록(거소신고)을 한 지 90일이 넘고,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주민”에게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8월 31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당초 서울시와 경기도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상당수 이주민을 배제했었다. 이주·난민 단체들이 이런 차별에 항의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했고 인권위는 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이를 서울시가 수용한 것이다.

이로써 이주노동자·동포·난민신청자·인도적체류자 등 서울의 일부 이주민들이 뒤늦었지만 지원을 받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

반면 인권위로부터 같은 권고를 받은 경기도는 여전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이주민이 가장 많은데 말이다.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하면서 경기도는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사유 발생시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은 없으며, 향후 다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 포함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종차별적 정책 탓에 이주

민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 속하고 각종 재난에서 불비하게 큰 피해를 입기 십상이다. 예컨대 전국이 집중호우 피해로 몸살을 앓던 지난 8월 4일 경기도 이천 읍면 실내체육관에 대피한 이재민 72명 중 50명, 읍면고등학교 대피소 30명 전원이 이주민이었다.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등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무관치 않았다.

경기도는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이유로 조례 개정 등 법적절차 이행을 들었다. 그러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2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대표적 인물이다. 그러면서 이주민에게는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또 경기도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든다. 그런데 이재명은 최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2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재정건전성 걱정을 자꾸 하는데 단언하건대 30만 원 정도를 50번, 100번 지급해도 서구 선진국 국가부채비율에 도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주민 재난지원금에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런 차별은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구는 8월 31일부터 ‘희망지원금’이라는 이름의 코로나 2차 재난재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는데 이주노동자·유학생·동포·난민들을 배제했다. 모든 이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도 “대구의 재난기금에 소요되는 2430여억 원의 1퍼센트에 지나지 않는 금액”이고 “더 나아가 미등록 체류자에게 지급되더라도 불과 열

마 소요되지 않는 금액”인데도 말이다.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한편, 미등록 이주민은 서울에서조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인권위가 “주민으로 등록돼 있는 외국인 주민”만을 대상으로 지급을 권고했고, 서울시도 그 이상은 지급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주민 5명 중 1명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나 방역지침 준수 의무 등이 미등록 이주민이라고 다르지 않다. 게다가 미등록 이주민은 건강보험 등 공공서비스에서 배제돼 있고, 불안정한 체류자격 때문에 해고 위험 등에 먼저 직면해 더 큰 고통을 겪을 수 있다.

“유학 또는 일반연수 등의 자격으로 거주 중이거나 자신의 비자에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7월에 정부는 배달대행업체에 취업한 유학생과 재외동포 등 166명이 “불법취업”에 해당한다면서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추방했는데, 서울시도 바로 이런 사람들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실업과 휴직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생계를 해결하려는 것이 왜 문제인가? 중앙정부든 지자체든 그들에게 최소한의 재난지원금조차 주지 않으면서 말이다.

재난지원금은 미등록자를 포함해 지원이 절실한 모든 이주민에게 지급돼야 한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중앙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에서도 마찬가지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소속 (☐ 직장 | ☐ 노조 | ☐ 대학교 | ☐ 종교동맹회 | ☐ 기타)

회비약정액 ☐ 2만 원 | ☐ 3만 원 | ☐ 4만 원 | ☐ 5만 원 | ☐ 기타 () 원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만 원, 청소년·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작성 후 사진을 찍어 보내 주시면, 확인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4909-2026, mail@workerssolidarity.org

* 2019년 3월 30일 개정

부동산 가격 상승세 계속 둔화될까?

강동훈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장관 35명 중 올해 재산을 신고한 18명의 절반인 9명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현직 장관 35명의 재산은 약 45퍼센트, 부동산 재산은 약 77퍼센트 늘었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0대에게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 자금 마련)해서 집을 사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앞으로 서울과 신도시 공급 물량을 생각할 때 기다렸다가 합리적 가격에 분양받는 게 좋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의 고위 인사들은 이미 집값 상승으로 어마어마한 이득을 챙겨 놓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택 구입을 미루라고 하고 있으니, ‘막차라도 타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걱정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또 염장을 지르고 있다’고 생각한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7·10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최대 6퍼센트까지 인상하고, 양도세를 3주택 이상은 72퍼센트까지 인상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곧 집을 팔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보수 언론들도 이를 두고 “징벌적 과세”라며 거품을 물고 비난하고 있다.

실제로 세금 인상 정책 등의 영향으로 일부 법인들은 아파트를 내놓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더 많은 임대사업자들이 집을 내놓을지는 미지수이다. 2017년 12월에 발표된 ‘임대주택 등록



‘영끌’의 절박함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부동산 광고들. 전셋값이 수억 원대는 가볍게 넘는다

활성화 방안’으로 등록 임대사업자들에게 준 세금 혜택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 등록된 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세제혜택을 100퍼센트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등록된 임대주택 157만 채와 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 51만 채는 양도세 중과논쟁 기준 양도세를 대폭 감면해 주는 혜택을 받는다. 등록된 임대주택은 종부세를 합산해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소유한 210만 채 대부분은 종부세도 거의 내지 않는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임대 아파트에는 세금 혜택을 없애도,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신규 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하

고 향후에도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한 것이다. 이 때문에 상당수 임대사업자들은 정부가 “다세대·다가구 주택에는 투기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해석했을 것이다. 지난 7월 서울에서는 다세대·연립주택 매매 건수가 2008년 4월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전셋값 상승

한편, 정부는 전월세 가격 상승을 막겠다며 임대차보호법도 개정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월세 계약을 한 차례(2년) 더 연장하자고 요구할 권리를 갖게 됐고, 계약 연장 시에 전월세 값은 종전 계약의 5퍼센트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도록 규제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4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9월 1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8월 전국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5월 0.05퍼센트에 불과했던 서울의 전세 가격지수가 0.43퍼센트로 급격히 뛰는 등 수도권이 전셋값 상승을 이끌었다. 특히 서울 아파트 전셋값 지수가 0.65퍼센트 올라 2015년 12월(0.70퍼센트) 이후 4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이미 집값이 많이 오른 데다 앞으로는 4년에 한 번씩만 전셋값을 올릴 수 있으니, 새로운 계약 때에 전셋값이 대폭 오르고 있는 듯하다.

물론 앞으로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는 잦아들 수도 있다. 이미 부동산 가격

이 많이 오른 데다 정부가 세금 인상과 일부 규제책을 발표했다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주택을 시장의 수요 공급에 내맡기고 있어서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와 집값 상승은 계속 발생할 것이다.

최근에도 정부는 태릉골프장, 용산 기지창 등을 택지로 개발하고,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높이는 식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총 13만 2000호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2018년에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했지만 최근에 또다시 집값이 대거 상승한 것을 보더라도 주택 공급 정책이 집값 상승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집값이 오를 때에는 세금과 규제를 강화하고 주택 공급 정책을 내놓다가, 집값 상승률이 떨어지면 ‘빚 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내놓는 식으로는 노동자·서민의 주거난을 해결할 수 없다. 시장의 관점에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는 한 이를 이용해 한몫 잡으려는 투기를 조장하는 동인이 생기기 때문이다.

당면한 부동산 투기와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공공성을 강화하고 부동산에 대한 시장의 영향력을 최소화해야 한다. 즉,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정부가 책임지고 지금보다 더 저렴하고 질 좋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야 노동자들의 주거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 위기의 고통 전가에 저항하는 계급투쟁을 강화하면서 저렴한 영구 공공임대주택 증설을 요구해야 한다.

코로나 재확산 와중에

노동자·서민에게 재정적자 부담 떠넘기는 문재인 정부

김승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노동자·서민의 생계난이 가중되고 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노동자들의 피해 사례를 제보받아 온 ‘직장갑질119’는 8월 28일 이후 거리두기 수준이 강화되면서 무급휴직·사직 강요(해고) 제보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재확산 흐름을 막기에 역부족인 ‘0.5단계’ 상황 조치였음에도 사용자들은 급세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2차 재난지원금을 하루빨리 지급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이런 요구를 외면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 이미 3차 추경에서 가용 재원을 총동원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차기 대선 주자이자 8월 29일 당 대표로 선출된 이낙연은 선거 기간 동안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해

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선한 후에는 재난지원금 대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직종별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했다. 어떻게든 보편 지급을 피하려는 것이다. 그렇다고 보편 지급할 경우 지출되는 재정을 그대로 저소득층에 다 몰아 주겠다는 것도 아니다.

또 다른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정부·여당의 선별 지급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보편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는 30만 원 정도는 전 국민에게 100번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경제부총리 홍남기는 “아주 절없는 얘기”라는 미래통합당 의원의 말에 맞장구치며 이 지사를 공개 비판했다가 일부 여당 의원들에게서 문제제기를 받기도 했다. 여권 내부에서 의견 충돌이 노골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금의 위기 대처 방식에 걸린 이해관계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한편, 8월 27일 정부는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2.89퍼센트 높기로 결정했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은 법정 기준(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퍼센트)보다 한참 모자라게 책정해 놓고 말이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건강보험료 누적 인상률은 이미 박근혜 정부보다 두 배 이상 높다(박근혜 정부 때 최고 인상률은 1.7퍼센트였다). 경제부총리 홍남기는 고용보험료도 단계적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험료·대중교통 요금 인상

또, 같은 날 정부는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어 노인복지법상 경로우대기준을 현행 65세에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1982년 법 개정 이전 기준인 70세로 높아질 거라는 관측이 많다. 이는 지하철 등 공공시설의 운임 할인(무임승차 등) 대상을 대폭 줄이는 동시에, 전반적인 노인 복

지를 축소시키고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개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시도 대중교통 승객 감소로 인해 재정 부담이 커졌으며 지하철과 버스 요금 200~300원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정부가 말하는 재정 부담은 대중이 져야 할 책임이 아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후 지금까지 600조 원 가까운 금융·재정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국민 전체에 지급된 1차 재난 지원금 재정은 그중 2.5퍼센트에도 못 미친다. 나머지 대부분은 기업주 지원에 쓰였다.

다시 말해, 정부·여당은 방역 책임(비용)과 기업주에게 퍼주느라 늘어난 재정 부담을 노동자·서민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다.

정말로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무려 301조 원을 투입해 사상 최대 규모의 군비 증강에 나설 계획(“2021~2025년 국방중기계

획”)이다. 9월 1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1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7퍼센트 넘게 증가해 53조 원에 이른다. 1차 재난지원금에 든 돈이 14조여 원이었다는 사실과 비교해 보라.

정부는 내년에 한국판 뉴딜에도 21조 3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인데, 한국판 뉴딜은 그 이름과 달리 친기업적 규제 완화와 저질 일자리 계획이 담긴 신자유주의 정책이다. 이낙연도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혁파 또는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주 지원과 국방비는 늘리면서 재정 적자를 이유로 서민들의 휘어가는 등골을 야금야금 빼먹으려 한다.

경제 위기 시기에 기업주와 정부의 공격에서 노동계급의 삶을 지키려면 더욱 단호하고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

이스타항공

일자리 보호 위해 국유화하라. 재매각 말고

유병규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이 무산된 후 재매각을 추진 중이다. 인수 의사를 내비친 사모펀드와 기업들에게 조만간 투자意向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더불어 법정관리도 신청할 계획이다.

이스타항공이 재매각을 통해 새로운 인수자를 찾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새로운 인수자가 나오더라도 노동자들에게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 경제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시장 경쟁력' 회복을 위해 진행되는 인수합병은 노동자 희생을 통한 비용 절감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인수 의사를 내비친 사모펀드와 기업들의 공통 요구사항이 비용 절감과 인력 감축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스타항공은 재매각에 앞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항공기 6대 운항에 필요한 인원 420여 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해고하려고 한다. 전체 노동자 1136명 중 7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을 처지다. 이미 제주항공으로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4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는데 말이다.



정부가 항공사에 지원한 막대한 재정 일부만으로도 이스타항공을 국유화할 수 있다

노동자들도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듯하다. 8월 31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지만 신청자는 100명이 채 안됐다. 7개월이 넘는 임금 체불, 파산 위기, 대규모 인원 감축 추진에도 노동자 대다수는 스스로 회사를 나가기를 거부한 것이다. 사측은 9월 7일에 대상을 발표해 나머지 600여 명을 정리해고할 계획이지만,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해고 예정일은 10월 6일이다.)

기업 파산 위기와 대규모 정리해고 상황에서 '고용 유지'가 우선이라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심정은 심분 이해할 만하다. 그럼에도 이스타항공노조가 공공운수노조, 정의당과 함께 “재매각 추진과 기업 회생을 위한 고통 분담”에 동의하고, 양보안(2개월 무급순환휴

직)을 제시한 것은 일자리 보호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런 양보는 되레 노동자들이 더한층 양보와 희생해야 한다는 압력만 키우기 십상이다. 이스타항공 사측은 노조의 ‘고통 분담’ 방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리해고를 밀어붙이고 있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은 이스타항공 위기에 책임이 없다. 일자리 보호를 위

해서는 정부가 이스타항공을 국유화해야 한다. 정부는 심각한 경제 위기, 기업의 파산 위기에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장할 책임이 있고, 그럴 만한 자금력이 있다.

정부는 최근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기업들에게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돈의 일부만 지원해도 이스타항공을 국유화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

또한 어떤 보상도 없이 이상직 일가의 이스타항공 지분을 몰수해야 한다. 이상직은 일가족이 가진 지분을 다 내놓겠다고 해 놓고 아직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최근 공개된 21대 신규 국회의원들의 재산 내역에 따르면 이상직은 약 212억 원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이 중 이스타항공(이스타홀딩스) 주식이치가 168억 5000만 원으로 가장 크다. 노동자들은 임금 체불과 해고 위기로 고통받는데 위기의 책임이 있는 이상직은 막대한 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 이스타항공 재매각에 반대하고, 정부가 국유화해 일자리를 보호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73%가 직접고용 전환?

번지르르한 포장으로 개혁 실패 덮으려는 문재인 정부

양효영

8월 27일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96퍼센트 달성했다는 실적을 공개했다. 정규직 전환 1단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기관 853곳을 조사한 결과다. 노동부는 대상자 20만 5000명 중 19만 7000명의 전환(18만 5000명 전환 완료)됐다고 밝혔다.

특히 그중 직접고용이 73퍼센트(13만 7000명)로 대다수라고 자랑했다. 자회사 고용 방식은 25퍼센트(4만 7000명)에 그친다고 했다. 정부에 친화적인 〈한겨레〉도 “4명 중 3명이 ‘본사 직접고용’”이라며 장단을 맞췄다.

노동부가 이런 발표를 한 이유는 정규직 전환 정책의 성과를 부각해 정부 비판 여론을 무마하려는 것일 테다. 정부가 자회사 전환을 강요한 것이 ‘인천국제공항(인국공) 사태’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들도 있어왔다.

공공부문 정규직화는 차별받아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의 낯뜨거운 자화자찬과 달리 문재인 정부는 이를 누더기로 만들었다.

이번에 발표한 성과도 구체적으로 따져 보면 기만적이다.

첫째, 노동부가 직접고용됐다고 밝힌 13만 7000명 중에는 애초에 직접



거짓말과 성과 포장으로 점철된 노동부 발표

고용이었던 기간제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가 7만 2000명이나 포함되어 있다.

더구나 노동부가 발표한 1단계 전환 대상 사업장 중 중앙부처, 자치단체, 교육기관은 법률상 애당초 자회사 설립이 불가능하다. 자회사 전환 비율 문제를 따지려면, 1단계 사업장 전체 중에서 아니라 자회사 설립이 가능한 공공기관과 공기업 중에서 자회사 전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봐야 하는 것이다.

이들을 제외하고, 공공기관과 공

업에서 전환 완료된 파견·용역 비정규직 7만 1000명 중 자회사나 제3섹터(사회적기업, 협동조합)로 전환된 인원은 4만 6960명으로 무려 65퍼센트에 이른다. 이 비율은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 대책’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바다.

둘째,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96퍼센트를 달성했다지만, 그 노동자들이 진짜 정규직화 된 것도 아니다. 자회사로 전환되거나 직접고용 됐어도 차별이 심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게다가 그 “계획”에조차 속하지 못

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80만 명가량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실제 규모는 100만 명으로 추산되지만, 정부는 정규직 전환을 시작할 때 42만 명으로 축소 집계했다. 그중에서도 여러 이유로 최소 25만 명이 전환 대상에서 배제됐다. 예컨대, 기간제 교사, 발전 비정규직, 다수의 민간위탁 노동자들이 제외된 것이다.

이번 발표는 1단계만 대상으로 했는데, 지자체 산하기관과 지방공기업 자회사 등이 대상인 2단계, 민간위탁이 대상인 3단계 실적까지 포함하면 전환 실적은 급락할 것이다. 정부가 3단계 민간위탁은 정규직화를 그냥 포기해 버렸기 때문이다.

셋째, 전환자들의 “처우개선은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복지도 “차별 없이” 적용되고 있다는 노동부의 주장도 거짓말이다.

무기계약직과 자회사 전환 노동자들은 여전히 처우가 열악해 결코 자랑할 만한 게 못 된다.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의 평균 임금은 월 271만 원으로 2019년 2인 가구 생계비(324만 원, 최저임금위원회)에도 못 미친다. 또한 단계적으로 처우를 개선해 왔다는 말과 달리, 정부는 전환자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을 강요하거나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직무급제 모델을 도입했다. 각종 수당 차별도 그대로다.

노동부는 이번 발표에서 자회사 운영 실태를 평가해 2020년도 경영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한다. 노동부는 자회사 처우 개선, 모회사 책임성 강화(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사내복지기금 등) 등이 포함된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이 방안들을 지킨 자회사는 거의 없다. 정부 발표만 보더라도 용역 회사에 지급한 비용을 처우 개선에 전액 활용한 곳은 32퍼센트밖에 안 됐고, 낙찰률 경쟁으로 인한 인건비 하향 압력도 여전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자회사 노동자의 임금은 용역 시절보다 25만 원 오른 256만 원에 그쳤다.

모회사의 책임 회피도 여전했다. 모회사 책임을 강화하겠다고며 내놓은 사내복지기금, 노사협의회는 대부분 운영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3월에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또다시 개선 방안을 내놨지만 이것도 제대로 지켜진 게 없다.

이렇게 된 책임은 무엇보다 정부에게 있다. 문재인 정부가 ‘돈 안 드는 개혁’을 추진한 탓에, 노동자들의 조건이 거의 개선되지 못했다.

이처럼 거짓말과 성과 포장으로 점철된 노동부 발표는 정부가 개혁을 제공할 생각은 여전히 없고 자기 정당화에만 급급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기후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한국에 비가 하루 100mm 안팎으로 세계 내리는 횟수가 지난 100년 동안 늘었다

김종민 사진

갈수록 심해지는 기상이변

기후 위기의 대안은 무엇인가?

김종환 대기과학 박사

이 글은 8월 31일 노동자 연대가 주최한 같은 제목의 온라인 토론회에서 필자가 발표한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기후 위기가 심각해 이대로 가면 재앙이 닥칠 공간이 크다. 과학자들이 재앙을 막기 위해 줄여야 하는 온실가스를 제시했지만 각국 정부들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은 그에 한참 못 미친다.

2018년에 UN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은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오른쪽 사진, 이하 특별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대폭 줄이지 못하면 그 이후엔 아무리 노력해도 기후 재앙을 막기 어렵다고 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다.

'지금이 기후 위기를 막을 기회'라고 지난해 스웨덴 청소년 그레타 툰베리가 호소한 것에 전 세계 수백만 명이 호응해 거리로 나왔다. 일부 나라에선 노동자들의 파업도 벌어졌다. 이런 아래로부터의 압력에 힘입어 기후 위기와 그로 인한 재난은 다시 한 번 사회적 화두가 됐다.

본 기사는 특별보고서의 제안을 다섯 가지 항목(에너지, 운수, 공장, 빌딩, 속도)으로 나눠서 살핀다. 각 제안에 부응하는 변화를 이룰 방안은 뒤이은 기사들에서 소개하고 있다.

물론 IPCC는 화석연료 기업들의 로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한계가 많다. 탄소포집저장(CSS) 기술처럼 사실상



제대로 검증이 안 된 기술, 핵발전과 바이오연료처럼 온실가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끔찍한 부작용만 낳는 기술들이 버젓이 대안에 포함돼 있기도 하다. 그런 만큼 이 보고서의 제안보다 온실가스를 더 많이, 더 빠르게 줄여야 할 것이다.

IPCC 특별보고서의 제안

첫째, 2050년까지 풍력·태양 발전을 대적으로 늘리고, 석탄·천연가스 발전을 퇴출시키고, 당분간 전기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

특별보고서는 89가지 가상 실험을 통해 현재(2020년) 대비 2050년까지 늘려야 하는 풍력과 태양 발전의 규모를 가능했다. 중위값은 28배였지만 일부 가상 실험에서는 170배나 늘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가상 실험들에서 앞서 말한 미심쩍은 기술들을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실제 필요한 풍력과 태양 발전량은 중위값보다는 최대값에 더 가까울 것이다.

반면 석탄과 천연가스를 태우는 화력 발전은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한다. 특별보고서는 석탄은 물론이고 천연가스 사용도 줄여야 한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2050년까지 석탄은 (중위값 기준으로) 1퍼센트 미만, 천연가스를 지금의 4분의 1 정도로 줄여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독일, 미국 등이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면서 천연가스 사용량을 늘리는 것은 진정한 대안이 되지 못한다.

한편, 특별보고서는 단기적으로는 전기 수요를 줄여야 한다고 봤다. 풍력·태양 발전이 느는 속도보다 화석연료 발전소를 더 빨리 줄여야 하는 것이다. 2030년에는 전기 사용량을 현재보다 15퍼센트 줄여야 하지만, 풍

력·태양 발전이 착실하게 보급된다는 전제 하에 2050년에는 현재 수준으로 회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둘째, 운수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80퍼센트 줄여야 한다.

화물차 등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상당하지만 이것은 마땅한 대체재가 없다. 그래서 특별보고서는 "별다른 묘책이 없는 만큼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풍력과 태양 발전으로 석탄과 천연가스는 대체할 수 있어도 석유는 대체하기 어려운 것이다.

세간에는 전기차가 미래의 자동차인양 각광받고 있지만 전기차는 기본 탑재되는 배터리가 이미 어지간한 화물만큼 무거워서 추가로 화물을 싣기 어렵다. 그래서 특별보고서는 운수 부문 배출을 줄이는 여러 가지 방안 중 전기차의 기여가 가장 적다고 봤다. 전기차 개발과 시장 확대에 야단법석을 떠는 언론이 실제 온실가스 감축 문제에는 얼마나 무지하고 관심이 없는지 알 수 있다.

셋째, 공장 가동에서 나오는 배출을 80퍼센트 줄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공장은 사회 어느 부분보다도 전기를 많이 소비한다. 더욱이 작업 공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도 상당하다. 특별보고서는 제철, 비철 금속, 화학, 비금속 광물(시멘트·유리 등), 펄프제지 같은 소재 산업들에서

온실가스가 특히 많이 나온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특별보고서는 2050년까지 공장 온실가스 배출의 80퍼센트를 없애야 한다며 공장의 전반적인 전기 효율을 높일 뿐 아니라 소재 사용량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주문한다.

넷째, 단열이 잘 되는 빌딩을 지어야 한다.

공장이 아닌 건물, 공공기관, 가정집 등이 빌딩에 속하고, 이 부문에서는 냉난방 에너지를 줄이는 게 핵심이라고 지목한다. 에어컨과 보일러를 최신 기종으로 바꾸는 것도 필요하지만 빌딩의 단열이 가장 중요하다. 설계부터 냉난방과 단열을 염두에 두고 건물을 지으면 가장 좋을 것이다.

특별보고서는 개발도상국들에 이런 인식 공법의 건물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건물은 한 번 지으면 수십 년 유지되는데 오늘날 개발도상국에서 새 건물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2030년 전까지 결정적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

특별보고서는 기후 위기가 재앙으로 발전하기 전까지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를 약 500기가톤가량이라고 추산했다. 해마다 42기가톤씩 배출하고 있는 만큼 이대로 가면 12년 안에 고갈된다. 그래서 2030년 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빠르게 줄이느냐가 결정적이라고 지적한다.

노동자·서민 피해에 주목한 해결책

특별보고서가 요구한 변화들을 시도할 전혀 다른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자본가와 노동자 중 누구를 중심에 놓느냐에 따라 그 방안이 달라진다.

전기 생산 부문

첫째, 온실가스 배출 없이 전기를 만드는 문제에서 자본가를 중시하는 대표적인 방식은 시장 제도를 이용해 자본가들이 풍력과 태양 발전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얼마 전 그리스의 중도 우파 정부가 비슷한 목표를 내걸고서 전력 부문을 일부 민영화했다. 그러자 자본가들은 그리스의 일부 섬을 사실상 통째로 발전소로 바꾸는 일에 착수했다. 그 섬에 사람이 이미 살고 있다는 것은 전혀 안중에 없었다.

해당 섬의 주민들은 갑자기 섬 곳곳에 들어서는 거대한 풍력 발전 장비 탓에 생활공간이 망가지자 투쟁에 나섰다. 이전까지 풍력 발전 확대를 요구해온 환경운동가들과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 활동가들도 섬 주민들의 투쟁에 연대하고 있다. “이건 환경이 아니라 자본의 탐욕을 위한 것일 뿐”이라는 그들의 주장이 백 번 울다.

독일 정부가 지난해 석탄 발전소 폐쇄 계획을 발표하면서 택한 방법도 전형적으로 자본가들을 중시하는 방식이었다. 석탄발전 기업과 탄광 회사에 6조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화석연료 기업들이 보상받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들은 오랫동안 온실가스를 내뿜고 환경을 파괴하며 돈을 벌었고 오히려 세계의 무수한 노동자들이 그 피해를 입었다.

자본가가 아니라 노동자를 중심으로 놓는 방식은 발전소와 탄광 회사, 전기를 주로 사용한 기업들에게 온실가스 배출의 책임을 물어 전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돈으로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짓고 폐쇄되는 석탄 발전소 노동자들의 생계와 재취업을 보장해야 한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민간 기업에 내맡기는 것은 사실상 전력 민영화로 이어 반대해야 한다. 이런 방식에는 태양과 풍력 발전에 투자하는 자본가들에게 보상해 주겠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다만 그 보상 방식이 보상금 지급이 아니라 이윤 추구를 허용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이처럼 시장을 이용하는 방식은 대규모 에너지 전환에 효과적이지 않다. 개별 기업주들은 사회나 심지어 해당 분야 전체의 필요보다 자신의 이윤을 앞세우기 마련이다. 그러다보니 최근 장마 시기에 곳곳에서 산사태를 일으킨 부실 태양광 시설이 세워지는 것이다. 안전에 충분히 투자하기보다 단기 이익에 매달리는 시장 논리가 낡은 결과다. 또 시장의 변동에 따라 다른 많은 산업처럼 해당 부문에서 충분한 이윤이 나오지 않을 경우 아예 사



“기후 변화가 아니라 체제 변화” 2019년 영국 청소년들의 기후 시위

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 2008년 경제 위기 당시 국내 주요 풍력 발전기 제조 업체들이 사업을 청산한 이유다.

시장 상황이 가장 좋을 때조차 기업주들은 에너지 전환 비용을 소비자인 노동자·서민에게 전가하려 할 것이다. 전력 민영화가 전기 요금 인상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는 매우 현실적이다.

한편 많은 환경NGO들과 개혁주의자들이 전기 사용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제안한다. 이 때 기업뿐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요금도 함께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방안은 단호하게 반대해야 한다.

한국에서든 세계적으로든 노동자와 서민의 전기 사용량이 유난히 많은 것은 아니다. 이들은 자본가들의 공장과 사무실보다 에너지를 훨씬 덜 쓴다. 아래 그림은 전체 에너지 사용량을 부문별로 나눈 것인데 노동자와 서민이 쓴 부분은 빌딩, 그 중에도 일부에만 해당한다. 빌딩 항목에는 대형마트처럼 기업들이 사용한 것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인상은 사용량을 줄이는데 효과적이지도 않다. 특별보고서는 “에너지를 최종소비단계보다 그 상위 단계에서 줄이는 것이 몇 배에서 몇십 배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한다. 사람들에게 에어컨 끄라고 하는 것보다 에너

지 효율이 더 좋은 에어컨을 보급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기후변화가 심해질수록 사람들이 생존하려면 전기를 쓸 일이 더 많아질 것이다. 예컨대 평범한 사람들로서는 폭염에는 에어컨을, 혹한에는 전열기를 켜는 것 외에 선택지가 거의 없다. 이런 사정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올리자는 것은 노동자·서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특별보고서가 단기적으로는 전기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고 했지만 기후 위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의 전기 사용량은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간극을 무기 생산 등 불필요한 공장 가동을 줄이거나 일부 공장은 아예 멈추는 것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것이 노동자와 서민을 중심에 둔 방식이다.

운수 부문

둘째, 운수 부문 배출(특별보고서에서 “별다른 묘책이 없는 만큼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했던 부문)을 줄이는 데서도 상이한 방식이 있다.

일각에서는 탄소세 도입이나 유류세 인상을 제안한다. 취지는 풍력과 태양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자는 것이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는 자본

가를 위한 방법이다.

탄소세나 유류세는 모두 소비 행위에 세금을 부과하는 소비세다. 그러나 소비세는 평범한 사람들의 불가피한 소비와 기업주들의 생산(이윤을 위한 소비)을 구별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기업주들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반면, 노동자·서민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 되기 쉽다. 상품에 매겨지는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지지할만한 대안이 못 된다.

노동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려는 것에 맞서 세계적으로 저항이 크게 벌어져 왔다. 2003년 한국에서 노무현 정부를 위기에 빠뜨린 화물연대 파업, 2018년 프랑스 노란조끼운동, 지난해 말 이란의 반정부 시위는 모두 유류세 인상에 반대하는 투쟁에서 촉발됐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런 투쟁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운동의 든든한 아군들이다. 유류세 인상이나 탄소세를 요구하는 것은 중요한 아군들을 적으로 돌리는 잘못된 전략이다.

무엇보다 각국 정부는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필요한만큼 유류세나 탄소세를 거두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했다가는 화석연료 기업들과 자동차 기업들, 이와 연관된 수많은 기업들의 이윤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국가는 기업 이윤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이를 지키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여긴다. 그것이 국가의 세계적 위상과 영향력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이는 다시 자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등에 업을 수 있는 중요한 경쟁력이 된다.

기후 위기를 막으려면 운수 체계를 근본에서 바꿔야 한다. 시작은 자동차와 비행기 대신 대중교통과 화물 열차를 늘리는 것이다. 단지 버스와 열차

대수를 늘릴 뿐 아니라 노선도 대대적으로 신설해야 한다. 현대 도시들은 승용차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는데 이를 대중교통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예컨대, 고속도로와 시내 도로를 대부분 버스 전용차로로 바꾼다면 버스 이용이 지금보다 훨씬 쾌적해 질 것이다.

현재 버스가 전국적으로 10만 대, 화물차가 300만 대 있고 서울에만 승용차가 300만 대 등록돼 있다. 버스를 빠르게 늘리고 승용차와 화물차는 줄여야 하고, 화물차를 몰던 노동자들이 버스를 운행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으로 그들의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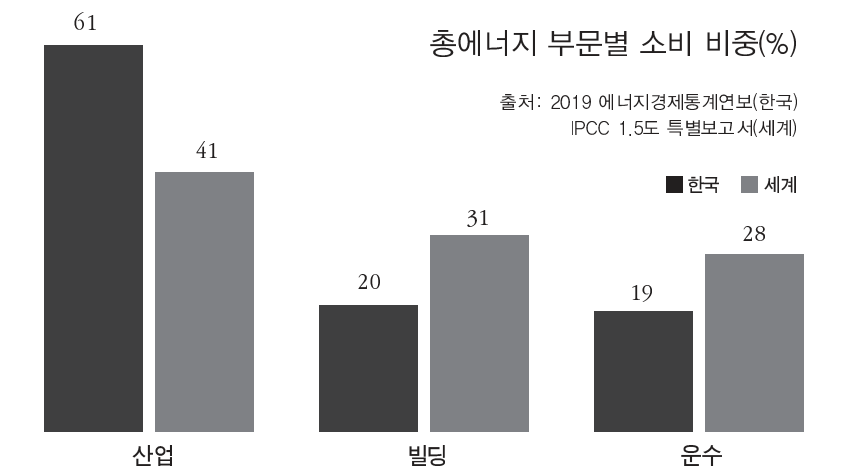
승용차를 대폭 줄이고 도로 대부분을 버스 전용으로 만드는 것은 자동차 기업의 이윤을 크게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가들이 격하게 반대할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 회사가 승용차(전기차 포함) 말고 다른 것을 생산하는 게 옳다. “필요한 모든 것을 강구해야 한다”는 특별보고서의 호소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자본가들도 받아들일만한 세금 제도 도입이 아니라 이들의 저항을 무력화할 힘이 필요하다. 기후 위기에 맞선 운동이 체제 자체에 맞선 운동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다.

기술적으로만 보면 자동차 회사들은 얼마든지 다른 것을 만들 수 있다. 지난해 덴마크 회사 베스타스는 호주의 포드 자동차 공장을 인수해서 풍력발전기를 만들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지킬 수 있다.

이처럼 운수 체계를 바꾸는 것은 산업 체계를 바꾸는 것과 연결돼 있다. 그러나 자동차 같은 일부 공장만 바뀌면 되는 것이 아니다. 필요하다면 공장을 옮길 생각도 해야 한다.

특별보고서는 ‘운수 효율을 높이는 것’(대중교통과 열차 확대), ‘불필요한



기후 위기를 막을 유일한 전략

운수와 환적 없애기가 전기차 도입보다 효과가 더 크다고 했다. 불필요한 운수와 환적을 없앤다는 생각을 논리적으로 끝까지 밀어부치면 최종 소비자에 가깝도록 공장을 옮기자는 대안에 도달한다.

핸드폰 공급을 생각해 보자. 한국의 삼성, LG, 미국의 애플, 중국의 화웨이가 설계한 핸드폰을 중국과 베트남 등지에서 조립해서 전 세계로 다시 옮기고 있다. 이것이 과연 최선일까? 만약 이 기업들이 기술을 공유해서 아프리카에서 쓸 핸드폰은 아프리카에서 만들고, 아시아에서 쓸 핸드폰은 아시아에서 만든다면 거대한 컨테이너선이 바다를 건너는 횡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따라 육지 교통도 크게 다 변화하고 운송 거리가 짧아질 것이다.

현대 자본주의 생산의 세계적 분업은 일부 지역의 생산력이 낮아서가 아니라, 단지 비용을 줄여 이윤을 남기기 위해 이뤄진다. 이런 산업들을 현지화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물론 자본가들은 이윤에 타격이 된다면 절대로 공장을 옮기려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트럼프가 전혀 다른 이유로 공장을 옮기면 세금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자본가들은 대부분 슬금슬금 피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운송 거리를 줄이기 위한 공장 이전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내가 일하던 공장이 다른 곳으로 떠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의 공장이 오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충분한 투자가 이뤄진다면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이유는 없다. 오히려 전 세계 핸드폰을 소수의 공장에서 생산하느라 한편에서는 가혹한 노동 조건이 강요되고 다른 곳에서는 실업이 넘쳐나는 모순도 없앨 수 있다.

공장 가동 부문

셋째, 공장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소재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는 특별 보고서의 제안도 노동자·서민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제대로 실현할 수 있다.

먼저 에너지 효율이 낮은 설비는 즉각 퇴출시켜야 한다. 그동안 자본가들은 에너지 효율이 낮은 설비도 최대한 가동하며 에너지를 낭비해 왔는데 이를 금지해야 한다.

또한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온실가스 배출을 염두에 두고 소재를 선택해야 한다. 흔히들 플라스틱이나 일회용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틀린 생각이다.

애초 플라스틱이 유리병을 대체한 것은 소비자들의 요구가 아니라 석유 사용이 급증하면서 그 부산물로 얻는 플라스틱이 싸기 때문에 기업들이 선택한 것이었다. 애플 같은 기업들이 일부러 제품의 수리를 어렵게 만들고 수

명을 단축시키는 것은 소재를 낭비해서 이윤을 늘리려는 작태다. 앞서 특별보고서가 “에너지를 최종소비단계보다 그 상위 단계에서 줄이는 것이 몇 배에서 몇십 배 더 효과적”이라고 한 것은 소재 선택 문제에도 적용된다.

자본가들은 무질서 속에서 세계 시장을 놓고 경쟁하기 때문에 중복 투자와 과잉 생산이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에너지와 소재가 낭비된다. 이런 낭비를 없애는 방법은 에너지를 가장 덜 쓰는 생산 방식을 공유하고 수요에 맞게 생산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당연히 자본가들은 이런 조치 하나 하나가 경영권 침해라고 반발할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는 자본가들의 경영권보다 더 중요한 게 많다. 노동자들에게는 이런 조치가 이익이다. 기술을 공유하면 경쟁으로 회사가 망해서 일자리를 잃을 위험도 줄고, 과잉생산을 줄이면 노동시간도 줄 것이다.

빌딩 부문

특별보고서의 넷째 제안은 빌딩의 에너지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건설 붐이 한창인 가난한 나라부터 최신식 단열 기술의 건물을 지어야 한다고 했다.

소수의 사람들만을 위해 소량만 비싸게 짓는 것은 소용이 없고 대규모로 지어서 무상으로 공급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윤이 남지 않기 때문에 건설 자본가들은 절대 그러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도 자본가를 중시하는 방식으로서는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 반면 ‘관리가 적게 드는 내 집 마련’이라니, 노동자와 서민들 입장에선 쌍수 들고 반길 일이다.

이런 조치가 개발도상국으로만 국한될 이유는 없다. 지금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 예컨대 홍콩의 끔찍한 집값은 지난해와 올해 거리로 쏟아져 나온 홍콩 대중이 입을 모아 성토했던 문제였다. 이런 나라들에서 노동자와 서민들이 부동산으로 고통받는 만큼 건설 자본가들이 부를 쌓았다. 그들의 이윤으로 단열이 잘 되는 집을 짓고 온실가스로 줄여야 한다.

추천 소책자



배따이들을 위한 환경 가이드
마르크스와 반자본주의 생태학
마틴 엠스 지음, 김종환 옮김
노동자연대, 80쪽, 3,000원
구입문의: 02-2271-2395

특별보고서는 2030년 전까지 결정적 전환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문제에서도 자본가들의 방식은 철저하게 실패하고 있다.

자본가들이 추진하는 방식의 한계를 잘 보여 주는 것은 다름 아닌 파리 협약이다. 온실가스 배출을 막기 위해 체결된 이전의 국제 협약은 교토 협약이다. 교토협약에는 그나마 공통의 감축 목표(1990년 대비 5퍼센트 감축)라도 있었다.(강제력은 없었고 그래서 이행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파리 협약은 각국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 만큼 특별보고서가 “각국 정부가 제출한 감축 목표로는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없다”고 단언한 것은 당연한 지적이었다. 자본가들의 자발성에 기대서는 상황을 바꿀 수 없고 그동안 시간만 까먹은 것이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도 별로 다르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효과가 큰 조치인 석탄 화력 발전소 폐쇄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외국에 석탄 발전소를 수출해서 국내외 환경단체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개혁주의자들은 이런 정부를 옹계 비판하며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의당만 해도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많은 이들은 아래로부터 운동이 자본가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옹계 본다.

그러나 개혁주의자들, 특히 개혁주의 지도자들은 자국의 국제적 위상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방안과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방안을 결합시키려 한다.

그런데 지금 온실가스 배출에 필요한 국제 협력이 안 되는 핵심적 이유 중 하나는 자본주의 경쟁 때문이다. 미국 트럼프와 중국 시진핑이 자국 국민들이 각각 대규모 화재와 수해로 피해를 입는데도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인 이유는 그들이 벌이는 무역

전쟁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온실가스 감축이 자국의 경쟁력을 갇아 먹을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실제로 특별보고서는 이렇게 강조한다. “대다수 모델 연구는 국제적 협력 부족, 불평등과 빈곤이 지속되는 채로 기후변화를 1.5도 이내로 억제하는 시나리오는 찾을 수 없었다.” 지금처럼 각국이 협력보다는 경쟁을 우선하고, 불평등과 빈곤을 양산해서는 기후 위기 극복에 필요한 고도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것이다.

“기후 변화가 아니라 체제 변화”라는 운동의 구호가 옳다. 즉, 우리는 자본가들과 그들 편인 정부를 꺾고 자본주의를 타도해서 에너지, 운수, 공장, 빌딩을 빠르게 바꿔야 한다. 앞서 봤듯이 자본가들을 중심에 놓은 방식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오직 각국 노동자들이 권력을 잡고 국제적 협력에 나설 때에만 변화를 이룰 수 있다.

기후 위기의 해결책을 찾으려면 전적으로 기후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운동이 아니더라도 체제의 각종 병폐에 맞서 이미 벌어지고 있는 여러 투쟁, 특히 계급투쟁과 접점을 찾으려고 해야 한다.

지난해 180개국에서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벌어졌듯이 올해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이 미국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크게 벌어졌다. 이 운동이 크게 벌어진 미국,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등지의 활동가들은 지난해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나왔던 사람들 중 많은 수가 이번에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도 나왔다고 전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인종차별을 조장하는 정부와 우파들은 기후변화에도 무책임하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를 보라.

더 근본적인 공통점이 있다. 지금 지배자들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대책에 소극적인 이유는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로 그 자본주의 체제가 차별과 착취, 독재와 빈곤 등을 양산하고 있다.

우리가 공통의 적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독재자에 맞서는 벨라루스 노동자들, 질산암모늄 폭발에 항의하는 레바논인들, 경제 위기 해고에 맞서는 세계 곳곳의 노동자들에게 연대하며 기후 위기도 함께 해결하자고 제안할 때, 그들은 귀를 기울일 객관적인 이해관계가 있다. 앞서 언급한 유류세 인상에 반대하는 한국 화물연대 투쟁이나 프랑스 노란 조끼운동, 이란 반정부 시위도 마찬가지다.

물론 지배자들은 여러 운동들이 서로 연대하는 것을 좌절시키고 이간질도 서슴지 않을 것이다. 역사를 돌아보면 혁명적 정치 조직이 강력한 때에만 지배자들의 분열 책동을 넘어 더 큰 단결로 나아갈 수 있었다.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국제 협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한 나라 안에서 노동계급의 투쟁과 연대를 전진시켜야 한다.

이렇듯 노동계급이 이미 벌이고 있는 투쟁에서 작은 승리를 누릴 때 기후 위기 대응에 필요한 거대한 전투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자본가들이 기후 위기에 필요한 조치에 맞서 거세게 저항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확신에 찬 노동계급만이 그런 저항을 뚫어낼 수 있다.

역사에서 혁명기마다 노동자들은 생산 수단을 장악하고 자신들의 필요에 맞게 통제했다. 1917년 러시아, 1956년 헝가리 혁명, 1970년대 칠레와 이란에서 그랬다. 기후 위기에 대처하려면 생산을 수십 년, 어쩌면 수백 년 동안 아주 세심하게 통제해야 한다. 또한 이미 시작된 기후 위기에 적응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생산을 통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금 경제 위기 상황에서 벌어지는 노동자 투쟁과, 차별에 맞서는 운동 등에 연대하면서 기후 위기의 해결책에는 자본가들의 방식이 아닌 노동계급의 방식이 있고, 그것만이 기후 위기를 막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후 위기를 막으려면 채식을 해야 할까?

기후 위기를 막으려면 육식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를 심심찮게 듣는다. 일부는 육식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많다는 IPCC 등의 보고서를 인용한다.

소가 내뿜는 메탄가스가 주요 온실가스라는 사실이 흔히 제시된다. 그러나 자세히 따져 보면 그에 못지 않게 소가 먹을 곡물을 재배하는 데서 막대한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에서는

농업도 여타의 산업 못지 않게 화석연료에 종속돼 있고 환경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결국 육식과 채식은 자본주의 농업이라는 같은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 채식주의는 이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

더욱이 채식주의는 노동계급의 집단적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많은 노동자들은 다음날의 고된 노동에 필요한 체력을 유지하기 위

해 육식을 선택한다. 채식은 더 비싸기도 하다. 이런 물질적 조건에는 눈감은 채 노동자와 평범한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죄책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채식주의는 기후 위기를 막을 효과적인 대안이 아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300호 기사 ‘운동 속 논쟁: 기후 위기를 막으려면 채식을 해야 할까?’를 보시오.

정의당 당대회 혁신안 채택

전보다 왼쪽으로 가려는 듯하지만 그 폭과 깊이는 심오하지 않다

김문성

정의당이 8월 30일 당대회(온라인 진행)에서 혁신위원회가 제출한 혁신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조기 당직 선거를 9월에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혁신위원회는 심상정 당대표가 총선 실패의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조기 사퇴하는 대신 정의당의 재도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치한 기구다.

혁신위원회는 석 달가량 논쟁을 거치면서 가다듬은 혁신안을 내놓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당 지도체제 변경과 강령 개정 방향(권고)이다. 당대회는 거의 그대로 통과시켰다.

정치적 지향성

올해 총선에서 정의당은 이전 의석과 같은 6석을 얻었다. 의석수는 제자리 걸음을 했지만 득표는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비례 투표에서 정의당 역사상 최대인 약 270만 표를 얻었다. 4년 전에는 170만 표를 얻었다.

정의당은 선거제 개정으로 원내교섭단체(20석 이상) 지위 차지하기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선거제 개정을 위해 민주당과 유착하는 바람에 노동계 진보정당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이 손해가 됐다. 선거에서의 득실을 제1기준으로 삼고는, 진보정당이 힘을 키우려면 어쩔 수 없다는 ‘현실론’에 기댔는데, 그 결과는 선거 성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셈이다.

특히, 민주당이 정당비례 투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어 정의당은 뒤통수를 맞았다.

정의당은 선거제 개정을 민주당의 힘을 빌려 이루려고 하다가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됐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개혁 배신과 개혁을 선포하게 비판하지 않았고, 조국·윤미향 등 민주당 정치인들의 부패와 위선에도 비슷한 태도였다.(노동계의 대표적 조직들인 민주노총과 진보당도 문재인 정부에게서 독립적이지 않았다.) 코로나 국면에서도 정부와의 협력을 중시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은 진보 염원 대중에게 뚜렷이 제시되지 못했다**. 바로 이 점이 민주당과 통합당 등 주류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 꿈수에 반격을 가할 힘이 별로 없었던 이유다.

그런데 국회에서, 정의당 내에서 정부와의 협력 노선과 선거제 개정을 앞장서 주도한 것이 심 대표였다. 물론 그가 대표 사퇴로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것은(리더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불가피한 조처는 아니었다.

그러나 총선 이후 제대로 된 정치적 평가와 그에 따른 노선 전환이 거론되는 것은 불가피하고 필요했다. 민주



8월 13일 정의당 혁신위원장을 맡은 국회의원이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당과 차별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저마다 강도나 이유는 달라도 정의당 내에 형성된 듯하다.

그러나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 실세 그룹과 관계가 매우 밀접한 친노 그룹 인사들이 창당 주역의 일원이고, 그래서 친문 성향 당원들이 당 기반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정의당 창당 주역인 유시민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의당을 탈당했지만 여전히 당 안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유시민은 조국의 부패를 앞장서서 옹호했고, 청와대를 수사하는 검찰을 비난하는 데 앞장섰다. 본인도 부패 의혹을 받고 있다.

정의당의 정치 방향 지향성이 쉽지 않은 이유이다. 정의당이 노동계 진보 정당으로서 선명성과 정체성을 강화하려면 간부층과 재정 후원자 면에서 교체와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결국은 정의당이 누구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냐는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다.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

누구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냐 하는 문제의식은 혁신안의 강령 개정 방향에도 드러나 있다. “개정 강령은 정의당이 누구의 곁에 서야 하는지 보다 분명하게 답아야 합니다.”

그리고 혁신안은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목표로 한 현재의 강령이 “현재의 인류와 한국 사회가 마주한 정치·경제·사회·환경 전반의 위기와 변화된 세계질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급변하는 정세를 반영한 적극적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업데이트의 필요성은 단지 시의성에 그치지 않는다. 현 시기 위기가 심

각해 더 급진적인 강령이 필요하다. 혁신위원회는 정의당의 현 강령을 “이전까지의 진보의제를 가장 온건한 수준에서 집약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 강령은 체제 내 개혁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의 탐욕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며,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개혁을 이룰 것이다.” 혁신안은 자본주의 비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의 소득 불평등, 자산 불평등, 빈곤 및 이를 영속화하는 자본주의의 모순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과 이를 넘어설 새로운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을 담아야 합니다.” “탈자본주의 대안사회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자”는 제안도 한다.

그러나 바람직한 변화 방향이지만 객관적 위기에 대응하기에는 여전히 온건해 보인다. 자본주의를 어떻게 극복하자는 것인지는 여전히 모호하고 사회주의를 말하지 않는다.

한편, 혁신안이 가리키는 전략 방향은 각 사회운동과 정의당을 연결시키겠다는 것이다. “노동과 생태, 젠더를 비롯한 다양성을 동등하게 존중하는 것이 진보의 핵심 가치라는 인식을 담아야 합니다.” 정의당으로 사회운동이 수렴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강령 개정 방향이 무난히 통과됐지만, 강령 개정 방향에서 혁신안이 제안한 상대적 급진성이 정의당의 실천에 얼마나 구현될지는 두고봐야 한다. 강령은 매우 추상적인 진술이고,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실천은 정책 대안과 개혁입법을 거의 배타적으로 강조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기존 정의당 노선에 대한 구체적이고 엄정한 평가 없이 우회적으로 강령 개정 방향에만 합의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의원단 중심

정의당의 혁신위 운영과 혁신안 마련은 조기 당직 선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번 당대회가 통과시킨 혁신안은 9월에 선출될 차기 지도부가 집행하게 된다.

이 점에서 9월 선거와 함께 지도부 개편안도 주목된다. 핵심은 당대표가 가지는 권한이 대표단 회의로 일부 이관된 것과 부대표가 3명에서 5인으로 늘어난 것이다. 소위 집단지도체제 형식을 가미하며 지도부 구성원을 늘린 것이다.

그러나 정의당의 지도력이 그동안 당대표에게 집중돼 있었던 것은 당헌·당규 때문은 아니다. 정의당이 상층 지도자들(특히 의원단)의 의회 대응에 중심을 두는 정당을 추구해 왔기 때문이다. 당내 주도력은 의원단에서 나왔다. 당의 실천도 입법안 마련과 그 홍보가 주된 것이었다. 이는 당 내에 사회민주주의 정당 특유의 조직구조와 정치문화를 형성케 했다. 이번 혁신위원장도 현역 의원인 장혜영 의원이 맡았다.

이런 조직구조와 정치문화 하에서는 의원단이 당을 주도하고, 의원단의 일원이 당대표를 하는 것이 오히려 책임 정치를 하는 것으로 비쳐지게 된다. 짧은 역사 속에서 정의당 당대표는 거의 언제나 현역 의원 몫이었다. 의원단 안에서도 지역구 다선 의원의 영향

력이 커진다. 각 계파들도 의원 배출에 거의 전적으로 매달리게 된다. 그렇게 정치협상가에게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된다.

정치협상이 중시되는 것은 정의당의 실천과 정치문화가 기존 사회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인정받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방증이다. 전 의원들이 엘지유플러스 같은 대기업의 자문이 되거나(추혜선), 문재인 청와대의 비서관으로 들어가도(김제남) 공개적 비판이 전혀 없다.

기층에서 운동을 건설하는 활동가층은 그다지 존중받지 못하고, 조직노동 기반이 과소대표된다. 차기 지도부 선거에서 좌파가 약진하리라는 기대가 크지 않은 이유이다.

의회 중심주의와 개혁주의가 극복돼야 하는데, 그 물질적 토대와 기본 원칙을 고려하면 정의당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기를 기대하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정의당의 기반은 기층 노동자들이 아니라 노동조합 지도자들(과 진보적 지식인층)이고 기본 원칙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를 이용한 국가와 사회의 개혁이다.

부대표가 5인으로 늘면서 달라진 것은 30퍼센트 여성할당제에 따라 여성 몫 부대표 두 자리가 새로 확보된 것이다. 기존의 청년(부대표) 몫은 청년정의당을 만들어 청년정의당 대표가 대표단 회의 정식 구성원이 되는 것으로 해결했다. 노동의 과소대표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이다.

당원 가입 후 6개월 동안 당비를 내야 당권을 주는 안도 통과됐다. 공직자 선출을 앞두고 페이퍼 당원 가입 부작용을 막자는 방안인데, 헤아려지는 면도 있지만 자본주의 국가를 중시하는 당의 수세적 정서를 드러낸 것일 수 있다.

요약하면, 정의당은 이번 당대회에서 민주당과의 차별화와 당내 리더십 혁신을 의도한 혁신안을 통과시킨 듯하다. 반성으로서 필요한 출발이다. 그러나 혁신안이 객관적 정세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약점을 극복하기엔 부족해 보인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 협력하는 노선의 실패와 부작용을 구체적이고 예리하게 비판적으로 평가하지 못한 점, 경제·코로나 위기 속에서 고통 전가에 반대하는 대중 투쟁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렇다.

wspaper.org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그리스-터키 영해 갈등이 보여 주는 것

미국 대선

인종차별 부추겨 지지층 다지는 트럼프

김준효

미국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도널드 트럼프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인종차별 선동이 트럼프의 주요 무기다. 사실 트럼프는 임기 내내 인종차별을 부추겼다. 8월 말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는 인종차별 반대 운동 참가자들을 “폭도, 아나키스트, 선동가, 약탈범”이라고 비난하며 “법질서 수호”를 외쳤다. 이는 1970년대 공화당 대통령 리처드 닉슨이 처음 사용한 “남부 전략”을 다시 쓰는 것인데, 당시 닉슨은 흑인 “폭력배”에 맞선 백인의 수호자를 자처했다.

트럼프는 “폭도가 당신들 문 앞까지 닥칠 수 있다”면서 공포심을 자극했고, “우리가 일군 것을 지켜야 한다”며 자경단 폭력을 고무했다. 트럼프는 돌격소총으로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 두 명을 사살한 카일 리튼하우스가 “매우 좋은 사람”이고, 8월 29일 포틀랜드에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공격하다 사망한 극우 단체 회원 제이 비숍이 “위대한 애국자”라고 떠들었다.

9월 1일에도 트럼프는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의 초점이 된 위스콘신주(州) 케노샤를 방문해 “폭동 피해를 수습”하겠다고 나섰다. 시위대의 “폭력”을 핵심 쟁점으로 삼으려는 속내에서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의 이런 행보가 “극우자경단의 폭력 사용을 사실상 용인하는 신호가 될 수 있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를 사살한 카일 리튼하우스

민주당은 대안이 못 된다

그러나 민주당과 바이든도 대안이 못 된다. 현재 바이든 지지는 정체 상태인데, 무엇보다 대중의 변화 염원과 교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바이든은 트럼프와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를 싸잡아 “일체의 폭력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케노샤·포틀랜드 등지에서 사람들이 경찰과 극우에 맞서 자기 자신을 지킨 것을 두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관련 기사 본지 333호 ‘미국 마르크스주의 단체 성명: 경찰 폭력과 우익 자경단의 테러 규탄한다’). 부통령 후보 카말라 해리스도 시위대의 “폭력이 … 증오와 분열의 불길을 키운다”며 바이든을 거들었다.

고 “트럼프가 인종 전쟁을 부추기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썼다.

친(親)트럼프 인사들도 트럼프를 거들고 나섰다. 우익 논평가들이 <폭스뉴스>에 출연해 리튼하우스를 “국보급 인물”이라고 띄웠다. 이에 고무된 인종차별적 극우와 친(親)트럼프 단체들이 8월 마지막 주말 곳곳에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를 공격했다. 우익 정치인·언론들은 이들이 자기 “재산”을 지키러 나온 사람들이라고 싸고 돌았지만, 사실 이들은 주(州) 경계를 넘어 “폭도 사냥”에 나선 것이었다.

한편, 트럼프는 행정부의 권력도 선거 운동에 동원했다. 8월에 트럼프는 “우편 투표를 하면 [민주당이 개입해] 선거 부정이 벌어질 것”이라며 미국 우정청(USPS)에 대한 긴급 재정 지원을 거부하고 우편 제도 구조조정에 나섰다. 우편 투표 기능을 방해하면 투표율이 떨어지고, 그러면 열성 지지층이 많은 자신이 더 유리하리라는 속셈에서였다.

구조조정 때문에 집배 노동자들의 임금이 삭감됐고 곳곳의 우편집중국에서 우편물 분류 기계가 멈춰 노동 강도가 세졌다. 코로나19 때문에 자가 격리돼 의약품과 생필품을 우편으로 배달받는 서민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이런 상황 때문에 강경 우파 지지층이 트럼프에 결집하는 모양새다. 상반기 내내 추락하던 트럼프 지지율은 8월 하순을 거치며 반등해, 몇몇 조사에서는 임기 초 지지율(40퍼센트대 초반)을 회복했다.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과 트럼프 사이의 격차는 한 자리 수 대로 줄었고, 몇몇 경향주에서는 일시적으로 트럼프가 바이든을 앞서기도 했다. 2016년 대선 당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이 두 자리 수대 지지율 격차를 유지하고도 트럼프에 패했던 것을 생각하면, 선거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선부른 듯하다.

코로나19

그럼에도 트럼프의 처지는 2016년과 같지 않다.

먼저, 현직 대통령으로서 트럼프



트럼프가 인종차별을 선동하자 이에 고무받은 극우 살인마들이 날뛰고 있다

는 미국을 짓누르는 경제 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모두에 책임을 져야 하는 처지고, 지난 선거 때처럼 ‘아웃사이더’를 자처할 수 없다.

올해 초 트럼프는 ‘경기 회복’을 성과로 내세우려 했다. 그 때문에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그 심각성을 무시하고 경제 재가동에만 몰두했고, 이는 방역 대실패로 이어졌다.

9월 1일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공식 통계로도 18만 7736명인데, 실제로는 이미 8월 초순에 20만 명을 넘어섰을 것이라고 <뉴욕 타임스>는 추산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가 심화시킨 경제 위기 때문에 미국인 수천만 명이 실업 보조금 없이는 생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즉, 트럼프는 스스로 자초한 이런 끔찍한 파국의 책임을 다른 데로 돌리고 지지층을 결집하려 인종차별적 선동을 핵심 축으로 삼는 것이다.(트럼프의 ‘중국 패리기’에서도 비슷한 의도를 읽을 수 있다. 관련 기사 본지 321호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제국주의 경쟁이 위기를 키운다’)

사가 속출하는 데에 민주당도 책임이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이런 탓에, “바이든의 정치적 입장을 지지”해서 바이든에 투표한다는 사람은 9퍼센트밖에 안 된다(<퓨리서치센터> 8월 조사). 다수는 “바이든은 트럼프가 아니기 때문”(56퍼센트)이나 “공화당 후보에 반대 투표하기 위해서”(7퍼센트)를 투표 이유로 밝혔다. 반면 같은 조사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럼프의 “리더십”(23퍼센트)과 “정치적 입장”(21퍼센트)을 지지하고 “트럼프가 미국적 가치를 추구”(17퍼센트)하기 때문에 트럼프에 투표한다고 밝혔다.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이 계속되다

트럼프의 우익 지지층 결집 시도와 그에 자극받아 날뛰는 극우에 단호한 투쟁으로 맞서는 것이 비할 바 없이 중요한 때다.

특히 인종차별 반대 운동이 중요하다. 그간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은 기성 체제를 뒤흔들었고, 체계적 인종차별을 공식 정치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시켰다. 이 운동은 트럼프와 미국 지배계급을 매우 난처하게 만들었고, 이전까지는 불가능하다 여겨지던 개혁들도 여럿 쟁취했다.

지금도 이 운동은, 위스콘신주(州) 케노샤에서 경찰이 비무장 청년 제이컵 블레이크의 등을 7발이나 쏘고 수갑을 채워 끌고 간 것을 규탄하며 전국 곳곳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관련 기사 본지 333호 ‘미국 경찰의 계속되는 흑인 총격: 인종차별적 체제에 맞서 계속 투쟁하다’).

8월 마지막 주말에도 케노샤·포틀랜드·시카고·로스앤젤레스 등 곳곳에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시위가 벌어졌다. 8월 28일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는 (마틴 루터 킹이 연설한 것으로 유명한)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행진’ 57주년 기념 집회가 대규모로 열렸다.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는 곳곳에서 극우의 ‘맞불’ 시위와 충돌했다. 트럼프가 대선을 앞두고 강경 우익 선동을 남발하는 지금, 극우 폭력은 더한층 격렬해질 수 있다. 예컨대, 케노샤에서 시위대 두 명을 사살한 카일 리튼하우스도 열성 트럼프 지지자고, 포틀랜드에서 시위대를 공격하다 반격에 부딪혀 죽은 제이 비숍도 트럼프 지지 단체 회원이었다.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은 계속 트럼프 정부와 극우에 맞서, “폭력 시

위” 운동에 위축되지 말고 단호하게 맞서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 민주당 친화적 대형 엔지오투들은 운동을 자제시키고 선거적 목적에 활용할 생각에 여념이 없다. 운동이 심화하려면 미국 사회주의자들이 지지하듯 “미국 전역의 운동에[서] 조직과 민주적 지도력”이 절실하다(관련 기사 본지 331호 ‘현지 사회주의자들이 전하는 운동의 현황과 과제’).

그런 운동에서 노동자들도 더 많은 구실을 한다면 그 운동은 더한층 급진화될 것이고, 변화의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 미국 노동자들은 전염병 위기와 경제 위기의 고통 전가에 맞서 팬데믹 초기부터 수백 건의 투쟁을 벌여왔고, 등교 개학 저지 등 중요한 성과를 내기도 했다. 노동자들은 곳곳에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에도 동참했다.

스포츠 선수들도 블레이크 총격을 규탄하며 곳곳에서 “경기 거부 파업”에 나선 지금, 노동자 대중이 영감을 얻어 트럼프와 인종차별에 맞선 투쟁을 심화시키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런 투쟁 속에서 혁명적 좌파가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추천 책

신간

인종차별과 자본주의

알렉스 캘리니코스 지음, 차승일 옮김,
책갈피, 156쪽, 8,000원



전국민고용보험

정부와 사용자 부담 확대 없는 짚금 개혁

이정원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속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7월까지 80만 명이 일자리를 잃거나 준 실직 상태가 됐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해지고 하반기 경제 전망도 어두워 고용 위기는 더한층 심화할 공산이 크다.

올해 상반기 고용지표를 보면, 특히 임시·일용직과 특수고용 등 비정규직 부문에서 일자리 감소폭이 컸다. 이들 대부분은 고용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고 실업급여도 받지 못한다.

정부가 기업들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 일부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지만, 생계 보전에는 턱없이 불충분하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보호가 최우선”이라고 말했지만, 고용 위기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데는 소극적인 반면, 기업 살리기에는 전력을 쏟고 있다.

물론, 정부는 코로나19-경제 위기 고통에서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실직자들에 대한 일정한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겠다고, ‘전국민고용보험제’를 꺼내 든 이유다.

그러나 정부의 거창한 말과 달리, 정부가 내놓은 추진 방향과 계획을 보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실질적인 개혁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너무나 미온적인

정부는 현재 1367만여 명에 이르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전체 취업자의 절반가량)를 2022년 1700만 명, 2025년 2100만 명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예술인,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 등 고용보험 적용에서 배제됐던 사람들을 일차 대상으로 삼고, 앞으로 자영업자까지 포괄한다는 구상이다. 그런데 일차 확대 적용 대상으로 삼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해서조차 단계적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의 고용 위기와 대중의 필요를 볼 때, 너무나 한가한 계획인 것이다.

사실 특고, 플랫폼 노동자까지 고용보험을 확대한다는 계획은 이미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내놓았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이었다. 그러나 3년 내내 거의 진척시키지 않다가 고용 위기가 심각해지자 부랴부랴 꺼내 든 것이다.

정부는 특고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최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내놔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를 올해 국회에서 최우선 입법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 내용을 뜯어보면, 고용보험 적용에 여러 제한을 둬으로써 특고 노동자 포함 범위를 상당히 제약하고 있다.

일단, 정부 개정안은 “노무제계약 체결한 사람 중 일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제공자”를 보험 적용 대상으



노동자 지원엔 소극적, 기업 살리기엔 전력투구 문재인 정부 계획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을 이루지 못한다. 7월 20일 대리운전노조 농성 투쟁 선포식

로 했다. 이는 많은 노동자들을 보험 적용에서 배제하는 내용이다. 특고 노동자의 상당수가 계약서 체결 없이 종사하거나 외관상 노무제공과는 다른 계약을 맺고 있다.

게다가 정부 개정안은 특고 노동자 중에서도 일정한 직종에 한해서만 보험을 적용하도록 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종만 해당되는 것이다.

노동부는 현재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수고용 직종을 고용보험에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즉, 특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할 때 갖 대가 된 ‘전속성’(하나의 사업자에 주로 고용돼 있는지 여부)을 고용보험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상당수 특고 노동자를 제외시킨 문제점이 반복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 개정안은 수급 요건도 다른 노동자보다 더 까다롭게 하고 보장 범위를 제한하는 등 차등을 두고 있다.

특히 특고 사용자 중 플랫폼 사업주에게는 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해 사용자 책임을 면제해 준 것도 문제다. 결국 이 비용은 노동자에게 전가되기 십상이다.

정부 개정안은 이런 내용을 특례 조항을 만들어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른 노동자들과 똑같이 적용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는 전국민고용보험을 추진한다면서 특고 노동자 전면 적용에도 턱없이 부족한 내용을 개정안으로 내놓았다. 역대 정부들이 그래 왔듯이, 문재인 정부 역시 특고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며 산재나 고용보

험 등의 일부 보호를 제공할 때조차 차별을 두는 태도를 고수하는 것이다. 노동무현 정부 이래로 특고 종사자의 노동자성 인정 문제는 첨예한 갈등 사안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역시 특고 노동자들의 노조법 개정 등 노동자성 인정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그러나 표면적인 계약 형태를 걷어내면, 특고 종사자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그 대가를 지급받고 자신의 노동을 통제할 수 없는 여느 노동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

정부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더 후퇴할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에도 기업주들의 압박에 타협을 거듭해 왔다.

사용자들은 정부 개정안에 대해 의무 가입이 아닌 당사자 자율로 하거나 특고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 축소, 고용보험 재정 별도 관리 등을 요구하고 있다. 통합당 의원들은 고용보험 재정 악화를 우려해 ‘재정 균형’을 강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누가 재정을 댈 것인가?

고용보험 대상 범위가 확대되면 그에 따라 보험 수입이 증가하지만, 새로 가입하는 대상 중 취약계층이 많아 고용보험 재정 소요는 더 커질 것이다. 결국 관건은 고용보험 재정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하는 점이다.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혜택이 돌아가려면, 사용자들의 보험료 기여분과 정부의 재정 투입을 대폭 늘려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아직 구체 방안을 확

정하지는 않았지만)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노동자와 사용자에게 노동자 임금의 1.6퍼센트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절반씩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소득 기반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소득 기반 고용보험’이라 불리는 이 방안은 고용보험 가입 시 노동자 여부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일정한 소득 수준에 부합하면 보험에 가입시키고, 개인의 소득(주로 임금과 사업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는 사용자와 정부에게 더 많은 재정 책임을 지우는 것과는 사뭇 다른 방식이다. 각각이 소득에 따라 보험료 부과 책임을 지게 되므로, 고용보험 재정이 대폭 늘어나야 하는 상황에서 되레 노동자들의 보험료 부담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사실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또는 세금)를 걷어 보험 재정을 마련하자는 아이디어 자체가 부족한 재정 확충을 위해 노동자 증세 방안으로서 제기된 것이기도 하다.

가령,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재정의 일정 부분을 소득에 세금을 부과해 마련하는 프랑스가 대표적이다. 물론 프랑스는 사용자 기여분이 노동자 기여분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추세적으로 사용자 부담 몫이 줄어 왔다.

한국에서도 소득 기반 고용보험을 제안하는 친정부 연구자들은 사용자 기여금 부담액은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플랫폼 사업주에게 기존 사용자들과 같은 비중의 보험료

를 부과하는 것은 가능치 않다고 본다.

최근 경사노위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에서 고용보험 확대 방안을 논의할 때도, 사용자들의 세금 부담이 적지 않다는 사회보장 재원 확충은 소득세나 간접세를 늘리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정부가 재정 투입을 대폭 늘리지 않는 것도 큰 문제다. 한국의 사회보장 지출 규모는 계속 늘어왔지만, 여전히 OECD 국가들 평균과 비교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은 OECD 하위 수준이다.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계획한 2020~2025년까지의 국비 부담은 고작 4조 원에 불과하다. 이 정도로는 최근 늘어나는 고용보험 적자를 메우기에도 부족하다.

결국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고면서 정작 재원 마련에서는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에 의존하려 하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든 보장 수준 향상이든 무엇 하나 제대로 되기 어렵다. 대상을 넓히되 보장 수준을 축소하거나 대상 확대가 짚금 수준에 머물기 십상인 것이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단계적 고용보험 확대라도 되게 만드는 게 현실적이라며 두둔하거나, 노동자들의 고용보험료를 인상해 취약계층을 지원하자는 제안으로는 제대로 된 고용보험 확대를 얻어 내기 어렵다.

정부의 재정 투입과 사용자들의 부담을 늘려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보장 수준도 상향하라고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프랑스 사회주의자가 말하는 프랑스의 전국민고용보험

프랑스 실업보험 개혁이 한국의 모델이라고요?

문재인 정부가 올해 고용보험 개혁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정부 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은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실업보험 개혁을 칭찬하며 벤치마킹하려 한다. 일부 진보·노동단체들도 이를 무비판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혁명적 사회주의 활동가인 **세드릭 픽토로프**는 마크롱 정부의 실업보험 개혁은 미사여구와 달리 심각한 후퇴를 낳았다고 지적한다.

현재 프랑스의 실업보험은 개악을 거듭해 지난 30여 년 중 최악이다. 그 래도 아직은 한국보다 보장성이 크지 만 말이다. 그럼에도 프랑스와 한국의 실업보험 개혁은 모두 같은 동역학을 따르고 있다. 바로 노동에서 자본으로 더 많은 가치를 이전시키는 것이다.

프랑스 실업보험은 주로 사회적 임금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국가가 (공공부조 원리에 따라) 부담하는 몫은 갈수록 줄어든 반면, 사회적 임금 몫(사회보험 원리에 따라 노동자와 사장이 기여금을 내는 것)은 갈수록 늘었다.

실업보험은 국가와 사용자 단체와 노조 간부, 이렇게 삼자가 관장하는 구조로 시작했다. 이른바 “사회적 동반자” 모델이다. 실업보험의 보장성이 정점에 달했던 시기는 1979~84년이 었다. 급여액이 많고 지급 기간이 길었 으며 지급 기준도 까다롭지 않았다.

그 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실업 보험이 개악됐다. 처음 공격이 시작된

것은 1980년대 경제 위기 시기 사회 민주주의 정부 하에서였다. 최근에는 2008년 경제 위기 이후에만 4번의 개 악이 있었다.

지난 35년간의 실업보험 개악은 다 음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됐다. 첫째, 실 업자를 세분화해서 수급자 권리에 차등 을 두고, 수급 신청 조건을 까다롭게 하 기. 둘째, 사장들의 기여 몫을 지속적으 로 줄이고, 보험기금 수입이 줄었다며 수급자 권리 축소하기. 셋째, 급여액을 깎겠다고 협박하며 실업자들이 저질 일 자리라도 받아들이도록 만들기.

사용자들의 공격에 노동조합 지도 자들은 거듭 후퇴했다. 그 결과 실업보 험은 실업 위험에 대비한 사회화된 보 험 체계로서의 성격이 점점 줄어들었 고, 노동자들을 갈수록 더 적은 급여로 버티게 하는 제도가 됐다.

최근 마크롱 정부가 추진한 실업보험 개혁은 이전의 어떤 개혁보다 큰 구조 적 변화를 가져왔다. 정부는 이런 변화



“마크롱이 사회안전망을 박살내려 한다”

가 진보라고 홍보한다. 최근 경제·고 용 변화에 맞춰 실업보험 적용 대상을 프리랜서나 자진 퇴사자 등으로까지 확 대하고, 재원 조달 체계를 개혁해 임금 인상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신규 가입자는 거의 늘지 않고 수급자 권리만 악화돼

그러나 마크롱의 실업보험 개혁이 진 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첫 째, 이른바 “사회적 동반자” 모델은 폐지 됐다. 노동자 단체는 실업보험 운용에 더 는 관여하지 못하고 정부는 행정명령만

으로 어떤 변화든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둘째, 실업보험을 더는 사회적 임금 이라고 보기 어렵게 됐다. 노동자들이 내는 보험료를 없앴 대신 보편적 세금 으로 대체됐는데, 사용자들은 세금을 가장 적게 낸다. 이것은 국가에 의한 기본적인 구빈 대책 논리로 회귀하는 것을 예고한다.

셋째, 수급자 권리가 매우 악화됐다. 개혁 단행 이후 정부가 내린 세 차례 행정명령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1) 구 직 활동이나 관련기관 규율에 복종하 기 등 이른바 “책무”를 다하지 않은 실 업자들에게 전보다 훨씬 많은 제재가 가해진다. (2) 수급 조건이 까다로워졌 다. 더 짧은 기간 안에 더 오래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원래는 실업 전 28개월 중 최소 4개월을 일해야 했 는데 이제는 24개월 중 최소 6개월을 일해야 한다.] (3) 수급액이 대폭 줄었 다.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시행이 9월 로 미뤄졌지만 말이다. 특히 가장 취약 한 노동자들(단기 계약, 파트타임, 빈곤 층 노동자들)의 수급액 감소폭이 가장 크다. 이런 노동자들의 비중이 지난 몇 년 동안 극적으로 늘었는데 말이다.

요컨대 보험료를 없애 임금이 늘어 나는 효과는 거의 없는 반면 전체 노동

계급 입장에서 보면 수급자 권리가 크 게 약화된 것이다. 프랑스 실업보험은 전례없이 권위주의적인 제도가 됐고, [기여에 따라 수급 권리를 획득한다는 원리는 사라졌다. 마크롱은 실업보험 적용 대상 확대를 진보로 내세웠지만, 실업보험 신규 가입자 비율은 쥐꼬리 만큼 늘었을 뿐이다.

마크롱의 실업보험 개악은 전체 복 지제도 개악의 일환으로, 노동에서 자 본으로 가치를 이전시키는 것이다. 동 시에 미래에 그러한 이전을 더 많이 더 쉽게 하기 위한 구조적 변화이기도 하 다. 이윤율이 떨어지는 상황에 대처하 기 위해서 말이다.

당연하게도 많은 노동자와 진보적 단 체들이 마크롱의 실업보험 개악에 반대 하고 있다. 실업자들이 원자화돼 있어 저항을 조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 지만 말이다. 그러나 고무적인 일도 있 다. 열악한 노동조건 탓에 고용과 실업 사이를 왔다갔다하는 처지인 불안정 노 동자들이 실업보험 개악에 맞서 스스로 조직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2020년 말 까지 실업자가 100만 명 더 늘어날 것 으로 예측되는 상황이어서 실업보험 개 악에 맞선 투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번역 김종환

벨라루스 반독재항쟁

정권의 탄압에도 시위와 태업으로 저항하다

토마시 탱글리-에반스

벨라루스 대통령 알렉산드르 루카셴 코가 체포와 해고를 벌이고 으름장을 놓으며 저항 운동을 굴복시키려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 항쟁은 여전히 결 연하다. 8월 30일 벨라루스 전역에서 수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대선 부정 이래 세 번째로 열린 주말 집회였다.

26년간 집권한 루카셴코는 8월 9일 대선에서 80퍼센트를 득표해 10퍼센 트를 득표한 자유주의 진영의 상대 후 보 스페틀라나 치하노우츠카야를 꺾 었다고 주장했다.

8월 30일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는 시위자를 엄벌하겠다고 루카셴코의 협박에도 10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시위 진압 경찰 병력과 장애물로 구축 된 저지선으로 민스크 시내 곳곳이 봉쇄 됐다. 구급차로 위장한 시위 진압 차량, 물대포, 군인들을 실은 버스와 병력 수 송 장갑차들이 이 저지선을 지켰다.

정부는 시위에 참여하려는 사람들 의 의지를 꺾으려고 시위 전날 “예방 차원의 체포”를 단행했다.

시위 진압 경찰이 대선 직후의 후폭 풍 때만큼 날뛰지는 않았다. 경찰 폭력 이 낳은 참상 때문에 오히려 항쟁 지지 가 늘었다. 그럼에도 경찰은 시위 현장 에서 개별 참가자들을 잡아채려 했고

시위가 시작된 지 두 시간 만에 시위 참가자 최소 125명을 구금했다.

거리에는 활기가 넘쳐흘렀다. 루카 셴코의 66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이날, “심판,” “퇴진하라” 하는 구호가 대통 령궁 근처에 울려 퍼졌다.

민스크 자유광장에서는 한 악단이 [빅토르 최의] ‘변화를 원한다!’를 연주 했다. 이 곡은 옛 소련에서 스탈린주의 체제가 붕괴하던 시기에 시위대가 즐 겨 부른 노래였다.

하루 전인 8월 29일에는 수천 명이 ‘민스크 여성 행진’에 참가해 “이 도시는 우리 것이다” 하는 구호를 외쳤다. 루카셴코는 탄압으로 위기를 헤쳐 나가기를 바란다.

노동자 파업 물결

8월 31일 월요일 루카셴코는 전국 70여 개 국영기업에서 일어난 파업 물결 을 주춤하게 했다. 루카셴코가 보낸 강 패들이 파업위원회 지도자들을 “불법 회 합”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체포해 갔다.

국영기업 벨라루스칼리의 탄산칼륨 광산 노동자들의 지도자 드미트리 쿠 텔레비치는 벨라루스 국가보안위원회 (KGB) 요원들이 자신을 “차에서 끌어 내 수갑을 채워 승합차에 태웠다”고 말 했다.

쿠텔레비치는 KGB 사무실 화장실 에서 창문을 타고 탈출했다.

벨라루스칼리 탄산칼륨 광산에서 일어난 파업을 보고 정권은 겁에 질렸 다. 벨라루스칼리는 정권한테 가장 중 요한 수출 기업이며 세계 탄산칼륨 생 산의 20퍼센트를 지배한다.

작업 중단으로 생산이 최대 40퍼센 트 감소했다.

정부는 민스크트랙터공장(MTZ) 파 업위원회 의장 세르게이 덜렙스키와 민스크차륜트랙터공장(MTKZ) 파업 위원 알렉산드르 라브리노비치를 체

포했다.

8월 30일에 벨라루스 독립 노조의 국제 간사인 리자베타 메를리아크도 체포됐다. 메를리아크는 정권이 중시 하는 또 다른 국영기업인 그로드노아 조트의 화학 단지에서 작업 중단을 조 직하는 데에 참여했다.

정부는 분노한 여론에 밀려 메를리 아크를 도로 석방했다. 그러나 메를리 아크는 재판에 부쳐질 것이다.

일부 노동자들은 여전히 작업장 복귀

벨라루스 자본주의 수호에 골몰해 온 루카셴코 정권

서방이든 러시아든 모두 다 벨라루 스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어붙이 고 싶어 한다.

루카셴코는 옛 소련이 몰락하고 동 구권이 1989년에 붕괴한 후에도 자유 시장 정책을 추구하지 않았다.

옛 소련과 동구권의 정권들은 “사회 주의”를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국가자 본주의였다. 지배계급인 국가 관료들 은 국제 무대에서 경쟁자들을 이기려 고 노동자들을 착취했다.

러시아나 다른 동구권 국가들과 달 리 루카셴코는 국가자본주의의 기반 산업 상당 부분을 그대로 남겨 놓았다. 루카셴코는 자유 시장이 자신의 통치 를 불안정하게 할까 봐 두려워했다. 루

카셴코는 대량 실업을 완화한 덕에 대 중적 지지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그러나 루카셴코가 중시한 것은 평 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벨라루스 자본 주의의 안정이었다.

2000년대 이후 루카셴코는 임금 인상 을 억제하고, 고용 조건 계약 방식을 바 꾸는 등 몇몇 자유 시장적 개혁을 추진하 기 시작했다. 그 정점이 모종의 노동연계 복지 제도인 “사회적 기생충세(稅)”였고 이것은 2017년에 저항을 촉발했다.

이런 개혁은 경쟁하는 제국주의 세 력들인 미국·유럽연합·러시아 사이 에서 벌이는 줄타기의 일환이기도 했 다. 루카셴코는 시장 개혁이 서방의 투 자를 끌어들이고 러시아에 대한 의존

를 거부하고 있다. 복귀한 노동자들 일 부도 생산 속도를 늦추는 소극적 저항 을 하면서 다음 파업을 조직하고 있다.

그로드노아조트 노동자 한 명은 이 렇게 말했다. “우리도 압니다. 우리는 작업을 멈춰야 해요. 그래야 정부가 손 해를 보고, 우리를 두들겨 패는 데에 쓸 몽둥이를 사들일 수 없겠죠. 투쟁을 여기서 멈출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더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비공인 파 업에 루카셴코 정권을 꺾을 힘이 있다.

을 줄일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러시아 자본 또한 벨라루스 의 국영기업들을 손에 넣고자 한다.

그리고 러시아 국가가 루카셴코 정 권의 생존에 일조한다면, 러시아의 올 리가르히*들은 벨라루스의 국가 자산 을 전리품으로 챙길 수 있게 하는 정책 을 요구할 것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크> 272호 / 번역 이원웅

🔍 용어설명

올리가르히

옛 소련 붕괴 후 러시아가 시장 자본주의로 전환할 때 막대한 부와 정치 권력을 행한 러시아 지배자 집단



정부의 K방역 노동자 일 시키는 건 안 건드린다

장호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재확산이 장기화되고 있다. 8월 14일 처음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는 뒤 9월 2일 까지 매일 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생기고 있다. 이 기간에 추가된 확진자만 5679명으로 전체 누적 확진자의 4분의 1이 넘는다.

확진자 중 특히 노인 비중이 늘면서 위중·중증으로 발전하거나 사망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중환자 병상과 전문 인력 부족이 너무 심각해 방역 당국 스스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을 정도다. 집단감염이 최소 17곳 이상이고 신규 확진자 중 감염 경로를 확인하지 못한 확진자가 20퍼센트를 넘어 방역당국의 추적 시스템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8월 16일부터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해 위험시설로 분류된 유흥주점 등의 영업을 중단시켰다. 그러나 기존에 위험시설로 분류된 물류센터의 운영은 유지시켰다. '경제'(기업 이윤)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였다.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8월 29일부터는 각종 음식점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카페 등의 매장 영업을 중단시켰다. 수도권에서는 고3 수험생을 제외하고 모든 학교에서 등교가 중단됐다. 이른바 '2.5단계'이다. 이미 모든 기준이 3단계로의 상향을 가리키는 상황에서 공장이나 사무실 등 기업 활동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만은 피하려는 조치였다. 3단계에서는 필수 유지 인원을 제외하고 모든 노동자들에게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재택 근무

재확산이 얼마나 오래갈지, 확진자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예측하기 쉽지 않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일상'을 보내는 공장과 사무실이 대부분 가동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위험 요소다. 콜센터나 쿠팡 물류센터에서 보듯, 많은 기업에서는 작업장 내 거리두기를 지키기도 쉽지 않다. 애당초 노동자들의 위생보다 생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만들어진 작업 공정 때문이다.

기업주들은 나름 방역에 신경을 쓰기도 하는데, 사업장 가동 중단 사태만은 피하고 싶어서다. 일부 대기업들은 가능한 수준에서 재택근무로 전환해 기업 내 확산을 최소화하려 한다.

그러나 재택근무도 순전히 기업 이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사무실 출근은 안 하지만 출장은 다녀야 한다. 집에 머무르니 아이를 맡기기도 어렵고 출퇴근 시간이 사라져 오히려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런데 집에 있으니 각종 집안일을 다



구급차에 실려가는 코로나19 확진자 인공호흡기나 산소치료가 필요한 위중·중증 환자가 2주 만에 10배 이상 늘었다

말아해야 하는 부담은 커졌다.

결국 현장근무든 재택근무든 그 부담은 개별 노동자들에게 떠넘겨졌다. 등교가 중단됐는데 돌봄서비스는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많은 노동자들이 아이들을 집에 남겨둔 채 출근해야 한다. 학교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조부모 등 가족이 돌봄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형편이다. 그조차 없는 경우 속수무책이다.

반년 전에 겪은 일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방역당국은 '언제든 재확산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지만, 아무 대비도 갖춰놓지 않은 것이다.

생계 지원

정부는 각종 음식점·카페 등에 영업 중단 명령을 내렸지만 이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대책은 없다. 이 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사실상 해고나 무급휴직 상태에 놓였다. 소규모 자영업자는 대부분 노동계급의 가족이거나 과거에 노동자였거나 앞으로 노동시장에 편입될 사람들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 거리두기로 인한 부담이 노동계급에 전가되고 있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진다.

정부와 기업주들은 경기 후퇴를 막아야 한다며 우는 소리를 하지만 진정

으로 보살핌을 받는 것은 기업주들뿐이다. 정부는 지난 4월에도 기업들에게는 수십조 원을 지원하고 노동자들에게는 달랑 30~40만 원의 재난지원금과 휴업·휴직 수당 정도(이조차 정부는 기업주를 통해 지원했다)를 지급했다.

코로나 재확산이 반복되면서 일자리가 줄고 무급휴직 기간이 길어졌지만,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요구를 '철없는 소리'로 치부하고는 지원 결정 자체를 차일피일 논의를 미루고 있다. 여당 내에서는 선별 지급하자는 의견이 다수로 보인다. 지난번에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사실상 4월 총선에서 이기기 위한 선거용이었다는 지적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다.

일자리를 만들고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은 코로나 이전에도 지켜지지 않았지만, 올해 들어서에는 아예 없던 일 취급하고 있다. 경제 위기 앞에서 문재인 정부는 기업 이윤을 최우선으로 지키려 한다.

악몽의 반복

이번 재확산이 언제 진정될지는 알기 어렵다. 앞으로 1~2주는 정부가 거리두기 '완화'를 저울질하는 기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착시 효과를 악용해 확진자 증가 추세가 충분히 안정되기 전에 거리두기를 완화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반대해야 한다.

거리두기로 인한 고통이 노동계급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으려면 일정 기간 거리두기를 3단계로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 지금은 정부가 일부 업종만 영업을 중단시키면서 아무 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 거리두기를 3단계로 상향하면 정부가 대부분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니 그 책임 소재와 지원의 필요성이 더 분명해질 것이다. 정부는 이 때문에라도 단계 상향을 꺼린다.

설사 이번 재확산이 진정되더라도 제대로 된 백신이 개발되기까지 크고 작은 재확산이 거듭될 것이다. 그중 일부는 이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전문가들은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우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다. 개발 중인 백신의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뿐 아니라 바이러스가 변이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인플루엔자처럼 매년 한 차례 백신으로 마스크를 벗고 살아가야 할 수 있다면 다행일 것이다.

코로나 감염으로 격리되고 후유증에 시달리고 죽어가는 사람들과 그 가족은 엄청난 충격을 겪지만 보상은 꿈도 못 꾸고 있다. 감염 위험과 해고 위협, 소득 절벽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울분이 쌓여 가고 있다. 이

렇게 된 데에는 기업과 정부의 탓이 크다. 문재인 정부가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 재확산의 책임을 돌리려 애쓰는 것도 이런 울분이 정부를 겨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물론 전광훈 일당 등이 코로나 감염 확산을 음모로 치부하며 방역을 방해하는 것은 기가 막히고 율화가 치밀게 한다.

코로나 위기에도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있고, 투쟁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추천 책



코로나19, 자본주의의 모순이 낳은 재난

마이크 데이비스, 알렉스 캘리니코스, 마이클 로버츠, 우석균, 장호중 외 지음
책갈피, 208쪽, 12,000원